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 본격화

오늘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18명 특별법안 발의 내달 중 시도의회 의견 청취·국회 법안 처리 전망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던 명칭과 주권사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특별법 발의가 가시화됐다. 특별법안은 다음달 중 국회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이 주민투표를 대신할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만 넘는다면 1호 통합특별법이 발의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28일 '전남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위한 제4차 간담회에서 통합시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포함될 전망이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공론조사 결과 반영 등 입법 심사와 수정·보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도로 마련된 특별법을 놓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2월 28일) 회기 중 특별법의 의결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발의를 기점으로 주민투표를 대신할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이뤄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상 국회 법안 통과 전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시·도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올려 의회 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2~9일, 전남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라, 이 기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7일 전남 영광 흥농읍의 한 돼지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되자 방역당국에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도,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202억원 투입

여객선 운임 지원·소외도서 항로 운영으로 이동권 강화 생활물류·연료·생필품 지원 확대…물가 부담 등 완화

전남도가 올해 섬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202억원을 투입한다. 여객선 지원부터 생활물류비 경감, 디지털 행정 도입까지 섬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주 여건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6년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총 202억원을 편성하고, 해상 교통과 생활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리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이동 불편과 높은 생활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해상교통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186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을 비롯해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 소외도서 항로운영

등 4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10개 소외도서, 8개 항로에 안정적인 배길을 운행해 해상 교통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물류 지원도 강화된다. 전남도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생활연료·생필품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주민들이 택배비 등 지원을 신청할 때 반복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활물류 운임지원 전용 앱'을 새로 구축한다.

전용 앱을 통해 증빙서류를 스마트폰으

로 간편하게 제출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체감 불편 부담을 낮추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섬 주민이 겪어온 지리적 불편을 당연한 것으로 두지 않고, 육지와의 실질적인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도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여객선 공영제 확대와 전국민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을 정부에 속속으로 건의하는 한편, 디지털 행정을 접목해 복지 수혜의 문턱을 낮춰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이치·통일교 금품'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명시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青 “관세합의 의지 美에 전달…차분히 대응할 것”

김용범·위성락 주재 회의 김정관·여한구 미국 파견 특별법 '2밀3초' 통과 전망

정부대는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합의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정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련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례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격상 '소방준감→소방감'

광주와 대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격상된다.

소방청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령·복장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도시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명확히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와 대전은 대도시이지만 소방본부장의 지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어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지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의 직급 불일치로 인한 지휘·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